

공 개



의안번호	제 30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2. 16. (제 3 차)

의  
결  
사  
항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2. 16.

## 1. 의결주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펀드 등 불완전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 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업무의 일부 정지(1월)’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 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감봉 3월’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으로 조치 요구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 의무), 제57조(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별표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별표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다.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2.5.) 심의필
- 제6차, 제7차, 제9차,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2021.3.24., 4.7., 5.4., 5.18.) 심의필
- 2021년도 제12차, 임시 제6차, 제21차, 임시 제8차, 제23차, 2022년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1.6.18., 8.31., 11.19., 12.2., 12.17., 2022.1.20.) 심의필

<별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중소기업은행 : 업무의 일부\* 정지 1월 및 과태료 56억 3천만원\*\* 부과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및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업무의 일부 정지 1월\*) : ①☒☒☒☒☒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②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2022.2.19.일부터 1개월간

- 조치사유(과태료) : ①☒☒☒☒☒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52억 3천만원\*, ②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4억원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16.8억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31.5억원,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4.0억원

◆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부과안을 수정 심의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28건 중 2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 <수정심의 사유> 중소기업은행의 자체점검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2건은 투자자가 설명내용 확인을 직접 이행했을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63건 중 10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은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 <수정심의 사유> 2건은 서류상 하자가 없고 직원이 일관되게 설명서를 교부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8건은 투자자 의사를 반영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중소기업은행의 자체 점검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3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감안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8건 중 6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 <수정심의 사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탁 6건을 투자권유한 직원(3명)은 투자권유 당시 관련 자격증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4건중 2건은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
    - \* <수정심의 사유> 투자자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안내문자로 오인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규정 미숙지로 부터 비롯된 과실로 보여짐
-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의결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합계액은 47억 1천만원임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제422조 제2항, 제424조 제3항, 제449조 제1항 제21호, 제25의2호, 제29호 [별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 22]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0조, [별표3], [별표6]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부행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前 부행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으로 조치
- 조치사유 : ①⊗⊗⊗⊗⊗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 본부장 000에 대하여 “감봉3월”, 부장 000에 대하여 “견책”으로 조치
  - 조치사유 : ①☐☐☐☐☐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팀장 000, 과장 000, 과장 000, 차장 000, 차장 000, 차장 000, 차장 000, 대리 000 총 24명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③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 조치사유 : ①☐☐☐☐☐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②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④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24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조, 제19조

## 2. 조치사유

### 가.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 ☐ 중소기업은행은 xxx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xxx명에 대해 20xx.x.xx. ~ 20xx.x.xx. 기간 중 ☐☐☐☐☐펀드 xxx건(xxx.x억원), 20xx.x.xx. ~ 20xx.x.xx. 기간 중 ☐☐☐☐☐☐☐펀드 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신탁 xxx건(xxx.x억원) 등 총 xxx건(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설명 내용 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 금지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1)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펀드 및 □□□□□□펀드를, ▲▲부는 ⊗⊗⊗⊗신탁\*의 판매를 각각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 ⊗⊗⊗⊗신탁은 투자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이나 신탁재산의 xx%에 투자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신탁”이 편입되어 있는 상품임

-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舊)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①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

-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투자되는 특성상 대출차주의 신용도가 낮아 경기상황 악화시 부실증가 등으로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부도·압류 발생시 투자원금 및 수익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 □□□□□펀드는 특수목적법인인 ☆☆☆가 발행한 (선순위)사모사채(note)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금은 특수목적법인인 ☆☆☆ 및 ★★★★★를 순차로 거쳐서 美 자산운용사인 ♣♣♣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3개)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이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됨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특수목적법인(대출실행 및 담보처분 등) 및 이를 통한 투자의 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x회\*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인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x,xxx억원(계좌수 x,xxx개)을 판매

- ◇◇◇◇◇자산운용(주)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선순위)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가 설립한 SPV인 ★★★★★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 SPV와 ♠♠♠♠♠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고

\* ❖❖, □□□, □□

\*\* ★★★★★ SPV는 ☆☆☆ SPV의 투자금과 美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인

♠♠♠♠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3개 업체(❖❖, ☒☒☒, ☒☒)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 20xx.x.xx. 동 펀드의 판매를 최초 결정한 이후 총 xx회에 걸쳐 추가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매한 동 사모펀드의 운용내역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투자대상자산의 xx%는 담보권의 순위가 후순위인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또한, △△△△부는 ◇◇◇◇◇자산운용(주)에서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상기 언급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동 펀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美 자산운용사인 ♠♠♠와 ♠♠♠ 펀드의 투자성과 등을 부각하여 표현되어 있고 동 펀드의 투자대상자산(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의 투자위험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신용카드대출채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면서
- 단순히 동 펀드의 만기(x~x개월)가 단기간인 점과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xx.x분기, xx.xx%)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x년 후행한 사실을 비교하여 동 사모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이로 인해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설명 과정에서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舊)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② □□□□□□펀드의 투자위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 및 왜곡 설명

□ △△△△부는 20xx.x.xx. 및 20xx.x.xx. 총 x회에 걸쳐 美 부동산담보부 대출채권 등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 □□□□□펀드는 특수목적법인 ☆☆☆☆☆가 발행한 사모사채(note)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투자금은 ◇◇◇◇◇자산운용(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채권 등(이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됨

- 20xx.xx.xx. 동 펀드의 판매를 최초 결정한 이후 총 xx회에 걸쳐 추가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매한 동 사모펀드의 운용내역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또한, 투자설명서에 신용카드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상업용부동산, 단독주택)의 부실률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美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률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x% 수준을 유지(상업용부동산 x.x%, 단독주택 x.x%)하여 “미국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방증”한다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부실률은 일반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연체율” 개념이 아닌 연체발생 이후 채권회수 및 매각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실비율 개념인 “상각률(charge-off rate)”로서
  -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상업용부동산 x.x%, 단독주택 xx.x%)”은 “상각률(상업용부동산 x.x%, 단독주택 x.x%)”보다 높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 xx.x%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상업용부동산 x.x%, 단독주택 xx.x%)이 신용카드대출의 연체율(x.x%)보다 높은데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률이 신용카드대출의 부실률보다 낮다고 설명하는 등

- 동 사모펀드의 부실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이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이로 인해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설명 과정에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연체율 등)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및 왜곡하여 (舊)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참고>

- ◆ 대법원(2011.7.28. 선고 2010다 76368 판결)은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사에게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생략)”라고 판시
- ☞ 동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은 상품제안서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 ★★★★★의 존재여부 등 정확한 투자구조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에 대하여 균형 있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③ ⊗⊗⊗⊗신탁의 투자위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 및 왜곡 설명

-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펀드”는 부동산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고위험 자산인 브릿지론 및 ABCP 형태의 부동산구조화채권 등에 투자되는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상품에 해당되나

\* ⊗⊗⊗⊗신탁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펀드”와 투자위험등급이 5등급(낮은위험)인 “※※※※펀드”에 각각 xx%, xx% 비율로 혼합하여 투자하는 “⊗⊗⊗⊗신탁”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상품

- ▲▲부는 (주)○○자산운용이 제공한 ⊗⊗⊗⊗신탁 상품제안서에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

자산운용에 확인하지 않고, ⊗⊗⊗⊗신탁의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만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 동 상품설명서의 “○○○○○펀드” 관련한 운용전략 부분에 “사모사채, 사모사채 구조화, 부동산 담보 Loan 등을 편입하여 중위험·중수익 전략을 추구”, 포트폴리오 부분에 “우호적인 조건의 투자 건 선별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투자대상은 금리 xx% 내외, 만기 x~x년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고정금리성 Deal들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과 같이 동 상품을 중위험 수준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 및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나) 영업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 ① 상품의 내용 등 설명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x명(개인 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x건(xx억원) 및 ⊗⊗⊗⊗신탁 xx건(xx억원) 등 총 x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가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 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舊)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②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억원) 및 ⊗⊗⊗⊗신탁 x건(x.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아 (舊)자본시장법상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2) 적합성 원칙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x명(개인 x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x건(xxx.x억원), □□□□□□펀드 xx건(xxx.x억원) 및 ⊗⊗⊗⊗신탁 xxx건(xxx.x억원) 등 총 xxx건(x,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및 투자자정보확인서 교부를 누락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상 투자자성향 설문지 항목을 판매직원이 임의 작성하거나 대필 기재하였음

### (3)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억원), □□□□□□펀드 x건(x.x억원) 및 ⊗⊗⊗⊗신탁 x건(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금융투자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판매직원이 임의 작성 또는 대필 기재하였음

#### (4)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제108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 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x.x억원) 및 ⊗⊗⊗⊗신탁 x건(xx.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설명서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5)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직원 xx명이

일반투자자 총 xx명(개인 xx명, 법인 xx개 업체)에 대해 □□□□□펀드 xx건(xxx.x억원), □□□□□□□펀드 x건(xx.x억원) 및 ⊗⊗⊗⊗신탁 x건(x억원) 등 총 xx건(xxx.x억원)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였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09조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  
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투자자 x명에게 ☼☼☼☼펀드 및  
☼☼☼☼☼☼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건을 발송하면서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투자  
대상자산의 부실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였으며

- \* 1) ☼☼☼ CEO의 운용사(GP) 지분담보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하락분 보충)  
2) 안전장치1 : 부동산 선순위 담보(LTV xx% 이하)  
3) 안전장치2 : 해외 후순위채권(Note) xx%  
4) 美 소재 SPV의 선순위채권 매입으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 등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준법감시인 심사필도 표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57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 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명의인의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 명의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등을 이용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법인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1) ●●●지점에서는

20xx.x.xx. 김OO 명의의 ☒☒☒☒☒펀드 계좌 x건(x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직접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이 휴대폰으로 전송한 운전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영상통화 또는 명의인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받는 등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2)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광OO 등 xx명 명의의 ☒☒☒☒☒펀드 및 ☐☐☐☐☐☐펀드 xx개 계좌(xx.x억원) 및 김OO 등 x명 명의의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x개 계좌(xxx.x억원)를 가족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및 가족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3)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유OO 등 x명 명의의 ☒☒☒☒펀드 계좌 x건(xx.x억원)을 제3자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제3자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4) ■■■WM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주)●●●●● 등 x개 법인 명의의 ☒☒☒☒펀드 x개 계좌(xx억원) 및 (주)▼▼▼▼ 등 x개 법인 명의의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개 계좌(xx.x억원)를 법인 명의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제3자인 대리인이 신청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통보예정(「금융위원회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중 제29(금융실명제 관련사항)의 “자”목)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라.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과 ⊗⊗⊗⊗신탁(xx~xx호)의 신탁계약(xx건)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에 관한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판매직원이 대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붙임)

## 관 계 법 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파악·서명 등을 통한 확인, 유지·관리 또는 확인 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파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의 고지·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삭제>

25의2. <삭제>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 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3조(설명 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삭제>		
버. <삭제>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함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2. 법인인 경우: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만원

<참고>

## □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 제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 II. 금융거래 형태별 실명거래 방법

##### 3. 대리인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함

#### III. 금융거래자별 실명거래 방법

##### 2. 법인 및 임의단체

###### 가. 법인

- 명의인이 법인이고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함

##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 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나. 감경 사유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3. 감봉

-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양정을 감경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공적은 제외한다.
  1. 제재대상 직원이 "주의"조치 이외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재 이전의 공적
  2. 제재대상 직원이 소속 금융기관 입사전에 받은 공적
  3.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닌 공적
  4.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공적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별표2> 제재양정기준

유 형 \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 ~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유형 \ 위법·부당의 정도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Ⅲ. 금융투자부문

###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 1. 제재대상

#####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명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직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 의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주 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은행과 산업금융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2100-2676 02-2100-2864	02-3145-7196